



# 노동조합 정치가 반이다

## 새로운 전략을 꿈꾸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sup>1)</sup>

5월 29일 현재 361,982명이 죽었다. 하루에 3~4천명이 죽어 나간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최대 66,704명을 수용한다.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다섯 번에 걸쳐 한꺼번에 사망한 것이다. 한국도 269명에 이른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거의 매일 열린다. 각 나라 정부는 앞 다투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금을 주고 있다. 이전 같으면 “포퓰리즘이다” “빨갱이식 발상”이라는 선동이 제법 있을 텐데 보수우익조차 잠잠하다. 그만큼 위기다. 이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영역을 흔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제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얼마나 지속될 지, 각 나라 정부의 대응이 효과가 있을지,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세계다.

그러나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후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된 점은 확실하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주의, 자연적 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약자가 먼저 희생되는 불평등,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무분별한 성장주의를 멈추고 함께 사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튼튼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이다. 반면 자본에게 기회란 이윤창출의 기회로 여겨진다. 공공성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을 거부하며 시장주도의 권력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때문에 기회 이전에 우리는 투쟁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어떤 기회냐 역시 어떤 투쟁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 이대로 안 된다

정부가 뜻밖이지근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점에 더해 재벌과 자본가에게 지원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된 지원금을 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조성에는 40조원을 쏟아 부는 반면 긴급고용안정대책에는 10조원만 배정했다. 물론 6월에 일자리대책을 통해 추가 보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소득세가 기업법인세보다 세수의 비중이 높은 것에 반해, 기업에는 4배나 많은 정부지원이 투입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은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그러나 고용위기 확대가 급속하고, 장기화까지 전망되는 충격에 비하면 미흡하다. 특수고용자의 규모가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하자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한시적 해고금지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주화의 한시적 중단까지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고용보험도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결국 또 다시 노동조합이 나서서 정책 변화를 촉구해야 할 판이다.

### 해고를 중단하라-각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대응

지금 각 나라의 노동조합들은 위기 대응에 분주하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해고위기에 대한 한시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사설

## 살려내자! 살려내자!

반토막 비례대표제조차 못했다. 아예 비례대표제의 민주적 취지를 갈아뭇간 위장정당들로 인해 2020년 총선 과정은 최악이었다. 총선 이후 위장정당의 위법성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① 두 위성정당은 ‘책임 있는’ 정당도 아니며,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 ② 공당의 계속성과 공고성도 없다 ③ 정당법 상 정당목적도 누락됐다는 비판이 높았다. 즉 위장정당 내지는 허위/가장 정당이라는 것이다(한상희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그는 이런 행위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아닌 권리남용에 해당(민법 제2조 제2항)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불법적 게임논리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는 결국 정치 모리배들의 소굴이 되기 십상이다. 유권자 다수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정당 민주주의의 국가가 아니다. 보수양당의 독점구조가 아닌 다양한 민의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05년 총선에서 위성/위장정당 파동을 겪은 알바니아의 경우처럼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로 개혁한 사례도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다.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지역구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종전 4:1에서 3:1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대응부터 출발해야 한다. 온갖 꼼수와 사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거법을 개정하리란 기대는 접자. 비례대표제 이슈를 다시 살려야 한다. 승자독식과 소수배제라는 반민주적 선거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한번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한 번의 도전에 불과하다.

다시 묻자. “민주주의 제대로 해봤니?”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은 끝도 없고, 중단도 없다. 가장 간절한 우리부터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자.

1) 2002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구호

‘부분실업제도 확대에 대한 법령’을 공표하여 건설, 제조업, 배달업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풀고 있다. 독일 역시 기존 조업단축제도를 완화하고, 적용대상을 과전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대략적 공통점은 ① 해고 회피와 고용유지 ② 노동 시간 손실에 대한 임금보전 ③ 사업장 안전을 위한 방역용품 공급과 노동안전보건 강화 ④ 유급 휴가 확대와 연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 재난을 기회로 바꾸는 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약삭빠름은 자본을 따라갈 세력이 없다. 어차피 생산과 시장을 장악한 그들이기에 위기의 대응도 강하고 빠르다. 자본은 코로나 위기를 공공성이 아닌 인력구조 조정과 시장권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 경총은 벌써부터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정부와 국회에 밀어 넣어 두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적 충격을 보자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자리한 산업이 대단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는 항공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월 27일 노조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 총선, 그 이후의 정치] 토론회에서 발제한 임운택 교수는 “낡은 산업의 구제전략보다 적극적, 선제적 시스템 개혁 논의를 노조가 주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투쟁도 투쟁이지만 결국 정치적·정책적 전략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해고금지’라는 방어전략 외에 우리는 어떤 선제적 전략을 갖고 있는가? 결국 답은 사회공공성 강화이지만 상투성을 벗어나 구체화된 실천 전략으로 배치해야 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여러 사회지표들은 우리사회가 극단적 불평등과 빈곤을 치유하지 않으면 공동체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경고한다. 경고를 무시한다면 코로나19는 파멸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지형으로는 어렵없는 일이다. 거대 보수양당이 과점한 국회는 약간의 변화와 안정적 유지 외에는 다른 상상력은 없다. 게다가 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사회 구조와 질서 위에서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다. 180석이라는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이 개혁의 힘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가깝다. 이미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기조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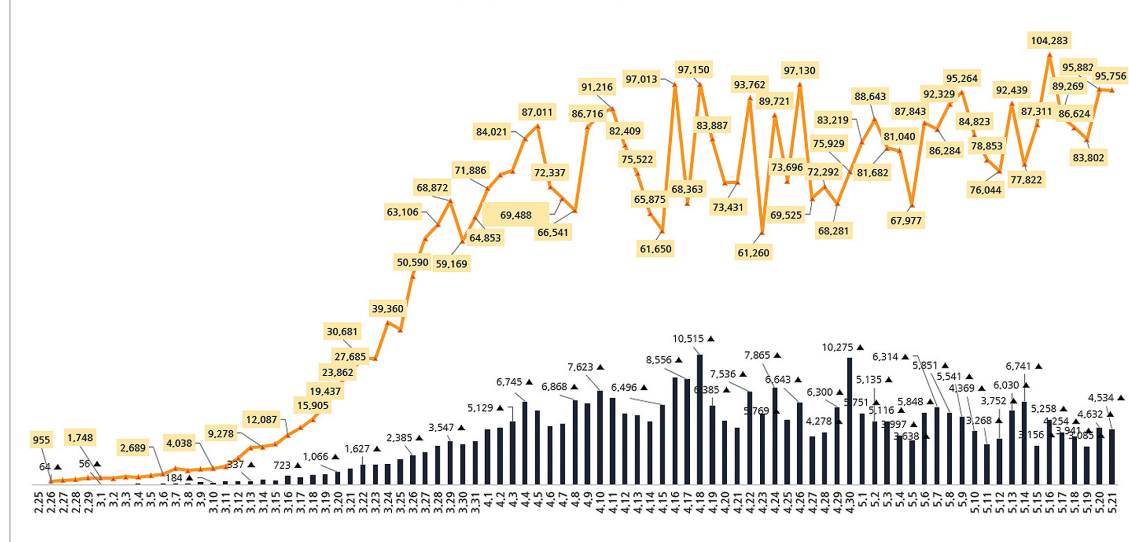
## 다른 세상을 향해 나가자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지금은 사라진 민주노동당가의 첫 구절이다. 그 꿈이 삭제된 지난 4월 15일 총선은 위성정당의 난장판 속에 끝났다. 극우 수구세력은 밀어냈지만, 입으로만 개혁을 말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뿐, 진보정당은 성과가 아닌 피해를 추슬러야 했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링크시킬 수 없다. 변혁이라는 역사적 낙관과 신념만으로는 일상의 위기에 직면한 대중과 호흡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불러들인 변화, 즉 공공성에 대한 집단적 자각을 사회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성 의제는 관성에서 벗어나 좀 더 예각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인력 확대가 절실하다. 가능한 부문들의 힘을 모아 해고금지를 넘어 일자리마련을 공세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원장 스피커로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연대해야 할 세력을 찾아 모으는 운동의 조직화도 필요하다.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보여줘야 할 때다. 새 세상 이전에 새로운 이슈와 전략을 꿈꾸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수 증감

■ 사망자수 증감 ▲ 확진자수 증감



## 제5차 비상경제회의의 지원 대책 주요 내용

### 40조원+α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 지원대상: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
- 지원방식: 고용유지 및 자구노력(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국민과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한 일시적 유동성 공급(출자·지급보증) 등

### 35조원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 매입 등 추가 지원

- 기존 발표된 100조원 상당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보완·추가 조치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일부 방안의 자금 소진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처)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0조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 5조원

### 10.1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286만명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0.9조원(52만명)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1.9조원(113만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조원
  -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용자 확대 등 0.4조원
-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3.6조원(55만명)
-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3.7조원(66만명)



사회공공성 투쟁  
철도

# “함께 살기” “우리 공공교통”을 실천하는 철도노동자

## 삼면이 바다인 섬 한국

국어사전에 섬이란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라고 정의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섬이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아” 한다. 가끔 주변의 지인들에게 “일제식민지하에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님이 어떻게 베를린에 갔을까?”라고 묻곤 한다. 이러한 질문 90% 이상의 사람들은 “비행기 아님 배”라고 답변을 바로 하곤 한다. 이에 “손기정님은 경성역(현재 서울역)에서 국제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 베를린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면 “진짜!!!” “와~!!!” 라는 반응을 보인다. 분단의 70여년의 역사가 어느덧 우리를 섬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인식을 고정시켜버렸다.

## “힘내라! 철도노조”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2000년 철도노동자는 “바뀌야 산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고, 2002년 2월 25일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그 후 정부와 자본의 철도 민영화정책에 맞서 2003년 6월, 2006년 3월, 2009년 11월, 2013년 12월, 2016년 9월, 2019년 10월, 11월 파업을 전개하였다. 거의 3년에 1번씩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250여명의 해고자와 2만5천여 명의 징계자가 생겼음에도 “공공철도”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공공철도를 향한 투쟁은 철도노조만이 아닌 “힘내라! 철도노조”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를 외친 국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만들어낸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SRT는 통합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 개통된 노선 및 앞으로 건설될



많은 노선들이 쪼개져서 민간 위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부동의 산재 1위의 공기업 한국 철도공사

지난해 철도공사는 350여 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률이 1위였다.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이후 2019년까지 총 45명으로 15년 동안 매해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인력의 부족과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안전시스템의 부재로 선로위에 피를 뿌려야 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다 죽고 다치는 현실을 넘어서고자 철도노조는 근무제도 개편과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의 총파업과 지속적인 노정협박 및 노사협상을 해왔으나 정부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하고, 해를 넘겨 보충교섭 투쟁 중에 있다.

## 역사란 과거를 현실에서 낮설게 보는 것

철도노동자는 지난 민주노조이후 20년간 8시간 노동제 쟁취, 안전인력 확충, 철도 민영화 반대를 걸고

쉽 없이 투쟁해왔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한다는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란 과거를 지금 이곳에서 낮설게 보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현실을 이제 낮설게 보자. 이러한 낮설음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배치하고,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 우리 공공교통(철도)을 향해 한 발 한발 나아가자

지난해 ITF(국제운수노련)는 “우리 공공교통” 운동을 시작하였다. 철도노조는 “우리 공공교통”이라는 국제운수노동자의 과제에 동의한다. 철도노조는 “우리 공공교통” 운동을 지난 철도노조의 투쟁의 역사를 낮설게 보고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라 판단한다. 이에 철도노조의 향후 실천 사업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중이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올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조직내부를 낮설게 봄으로서 우리를 혁신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구체적 실천을 하는 철도노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 조직의 목표이다. 또한 2021년 정부의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획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현장조합원이 함께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민영화 반대” “공공철도 강화”를 넘어 우리 공공교통으로 나아가는 철도노동자의 구체적 실천과 철도산업의 미래전망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철도노동자들의 연대와 교류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의 전개를 통해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것은 평화철도의 시작이며, 대륙철도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철도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시대에 단절과 고립, 양극화와 배제를 넘어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함께 살기”를 실천할 것이다. 이것이 2020년 철도노동자의 과제이고 실천이다.

신동호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



# 원격의료가 아니라 더 많은 공공의료를!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전화로 의사와 화상 진료를 한다. 그리고 처방을 받는다. 집으로 약이 택배로 배달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원격의료’하면 떠올리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아직은 과학소설의 한 장면이다. 갤럭시 워치 보다는 애플워치4의 심장 계측도 미식약청(FDA)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원격의료는 아직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다.

사실 원격의료는 ‘전화상담’으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부터 주치의제도와 함께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전화상담이 주치의의 의무다. 동네의사는 24시간 자기가 맡은 환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해야 한다. 물론 밤에는 동네 의사끼리 돌아가면서 하거나, 젊은 의사를 알바로 쓰기도 한다. 밤에 아이라도 아프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한국은 아직도 전화 상담이 없지 만 말이다. 그 뿐인가 주치의는 왕진

도 한다. 외병상태인 환자는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방문간호사가 1~2주에 한 번, 의사는 1달에 한 번 왕진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의료공백이 생기는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동네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전화 상담을 받는다. 전화로 해결이 안되면 옆에 줄을 서서 대기 중인 택시를 타고 왕진을 간다. 즉 전화 상담이 당연하고 왕진이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이것을 건너뛴 채 갑자기 원격의료를 그것도 의료산업화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유로 도입한다고?

만일 한국이 공공의료가 튼튼하고 전화 상담과 왕진도 하는 사회라면 기술이 발전한 만큼 ‘원격의료’를 천천히 도입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한국은 공공의료가 전체 10%(OECD 평균 71.2%) 밖에 안 된다. 많은 지역에 분만실이 없고 (246개 지자체중 40개) 응급센터에 30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전

국의 1/4에 해당한다(60개 지자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라도 터지면 이번 대구 사태에서처럼 민간병원은 이런 위험한 환자를 안 받아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 대구의 6500명 코로나 환자 중의 3/4을 대구 경북은 물론 경남 부산을 넘어 서울의 공공의료기관까지 다 나서야만 했다. 10%의 공공병원이 77%의 코로나 환자를 봐서 겨우 1차 파고를 막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대비책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자. 코로나 환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원격으로 치료했는가? 유럽에서 시범 사업 중인 희귀환자나 일부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심장병이나 만성 폐질환자)에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다. 아직 검증도 안 된 갤럭시 시계를 의료기로 승인한다거나 검증도 안된 원격(화상)의료기기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근거로 드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병의원들이 했다고 하는 22만건의 전화

상담/전화처방이다. 22만건은 2018년 기준으로 1년 병의원 처방의 0.042%다. 이게 무슨 근거가 되겠는가. 정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전화 상담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전화 상담을 한들 정부에서 의료산업화가 ‘10대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돈이 안 되는데.

정부가 들고 나오는 원격의료는 결국은 전 국민에게 모두 삼성, 엘지, 에스케이가 만든 원격의료기기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검증된 바가 없는 기계들이고 비싸다.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간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아무 나라도 하지 않는 전국민 원격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그것을 전송하면서 얻는 개인의료정보를 통신회사들이 가져가려는 것이다. 또 민영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로 만들어,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넓히려는 계획이다. 이쯤은 되어야 10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을 말아먹을 재벌들의 차세대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다, 재벌들에게는 보건의료부문을 돈벌이 분야로 만들 황금알을 빼앗아가는 것이겠지만, 노동자와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임이 입증된 공공의료와 방문 진료 및 주치의제도의 강화와 도입을 먼저 하자는 운동이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얻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또 의료민영화를 하자는 재벌들에 대항하는 경제위기 시기의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다.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 시대를 맞는 노동자들의 구호는 이것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총선 끝, 정치사업도 끝?

교육공무직본부 활동에는 정치가 있었지만 정치가 없었다. 각종 사회 이슈에 참여하고 국회와 시도의 회를 향한 활동은 이미 정치고, 반면 정치는 노조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통념을 고려해야 했기에 정치가 없었다. 그러나 본부는 지난 21대 총선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과감한 정치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과감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전에 없던 것을 실천하고자 함인데, 바로 상시적 정치사업을 꾸준히 끌고 간다는 의미다. 즉 일회성 총선대응에 그쳤던 과거를 벗어나 일상적 체계와 중장기적 목표를 갖추어 활동하고자

하는 조직의 의지다.

본부는 지난 5월 운영위 회의에서 '상시적 정치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의결했다. ① 조합원을 위한 정치 의제와 사업의 발굴 ② 4만 조직의 역량을 정치 역량으로 연결, 정치적 영향력 확대 ③ 운동으로서의 정치와 제도를 통한 정치에 대한 균형적 참여 ④ 교육선전과 일상 실천을 통한 조합원 사회정치의식의 발전 ⑤ 정치적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와 결합도 높이기 등이 그 목표다.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조직을 정비했다. 처음으로 각 지역 임원과 사무처로 정치담당을 꾸렸고, 하반기 임

시대의원대회 이후에는 정치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 다시 교육선전부터, 조직 특성 살린 정치활동까지

우선 중점을 두는 사업은 조합원의 정치사회적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선전이다. 정치관련 교육선전 기획을 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선전 경로를 발굴해야 한다. 그 과정은 일방적이어서 안 된다. 조합원의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도록 대중성을 갖춰야 하며 방식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맞춘 공공운수노조 등 상급조직 맞춤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무직만의

특성을 살린 정치활동도 중요하다. 교육정책 개입을 통한 학교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본부만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며, 우리 조합원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활동일 수 있다.

총선이 끝났다. 노조 정치위원회의 이완도 나타난다. 이렇게 끝내서야 노동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공공부문은 특히 그렇다. '정치가 반이다!' 상시적 정치활동을 위한 계획과 체계를 갖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및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참으로 멀고도 멀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 전환 꾀수를 부려 오늘날도 곳곳에서 투쟁이 진행 중이다.

보라매병원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랜 투쟁 끝에 서울대병원 노·사가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것이 2019년 9월 3일이다. 이 합의에 따



라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유독 보라매병원 측과 병원장만이 노·사 합의를 부정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병관 병원장은 장례식장 노동자들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자동화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예약센터 노동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월 23일, 보라매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했었고, 노동절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월 21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지부 간부·대의원 결의대회도 진행했었다. 또한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의 위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공관 앞 피켓팅을 매일 진행하

고, 보라매병원 내 피켓팅도 하루에 2회씩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거세어지며 잠시 농성장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었으나 결국 5월 25일 정규직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력투쟁 선포식과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침발표를 보며 정규직 노동자를 꿈꿔 왔지만 보라매병원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한 십여 명의 노동자들도 있다. 이제 그동안 눈물만 흘리던 이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 날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및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조합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시간끌기로 나오는 병원에 선전포고를 하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홍유휜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 코로나 바이러스와 노동조합 ①

# 심각한 타격,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이사장이 소유한 금호문화재단에서 항공 기취급업을 하는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이 코로나 위기로 무기한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에 내몰렸다. 지난 5월 11일에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8명을 정리해고하여 투쟁이 진행 중이다. 종로구청을 코로나를 핑계로 천막을 철거하고 집회 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를 넘어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고용·생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는 개별 사업장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고용과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동시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사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처럼 위기의 속도도 빠르고 광범위하다. 연대와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인수합병, 연쇄붕괴, 해고, 임금손실, 과로, 감염, 배제, 격리, 갈등의 양산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국제선은 98%, 국내선은 약 40% 가량 운행이 감소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대기업 항공사는 아직은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가항공사는 인수합병과 정리해고가 빠르다. 지상조업 등 항공사 하청 비정규직은 무급휴직, 아시아나·KO 등은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지역에서는 항공관련 민간업체까지 광범위하게 휴·폐업하면서 지역 서비스업 붕괴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기관은 의심자와 확진자가 공공병원에 집중되면서 과로와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에 개인보호 장구가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소속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장시간 노동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인 간병노동자에게는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감염 위험에 과로, 차별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장애인·노인 재가서비스

스 신청이 줄어들면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소득이 격감했다. 그러나 해고·무급휴직의 경우가 아니고 특수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고용지원 대책에서도 배제됐다.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용형 시설은 고위험 감염 공간이 됐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코호트 격리로 갇힌 일상을 겪어야 했다.

특수 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서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과 줄어든 일감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은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했다. 학교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등은 계속된 개학연기로 아무런 수입이 없다. 나 몰라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책이 미흡하여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철도, 지하철, 공항 등 대중교통은 시설 이용이 급감하면서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연말까지 철도공사가 약 1조원, 서울교통공사는 약 3천억 원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 예산을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서 적자가 누적된 결과 향후 안전은 오히려 소홀해진 우려도 있다. 원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노선이 축소되면서 단축근무와 전면휴업 등이 발생하는 등 교통관련 공공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뭉쳐야 한다지만 학교 교육공무직은 임금손실과 더불어 장기간 개학연기로 인해 겪어보지 못한 갖가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과로를 호소하는 부분도 있으며 그 와중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극심한 갈등으로 상처를 받아야 했고, 향후 차별 개선의 희망은 어둡기만 하다.

그 외에도 업무 특성에 따라 생활격리수용시설로 지정되면서 휴업하거나 기관 운영이 정지되어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진 기관도 있고, 코로나19 방역 지원 업무가 폭증하여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사업장들이 발생하고 있다.

## 가중될 위기, 그 다음이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수출지향의 경제구조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타격이 더욱 큰 구조다. IMF 때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고용과 생존권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당연하

지만, 그것은 '결과'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위기를 몰고 온 경제구조라는 '원인'에 대한 대응과 중장기 대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불러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게 예정된 것이 없다. 심지어 내년까지 3차 이상의 확산이 이어진다는 예상도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도 18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의료계의 예측이다. IMF가 내놓은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어둡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1.2%를 예상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경제위기가 단순한 성장세 둔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실상 온전히 막아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피해를 딛고 향후 어떤 사회와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인가가 더 현실적 질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최대한 피해는 막아내되 변화를 위한 질문과 행동을 놓치지 말자.

## 먼 봄

김해화

별들 말하네 기다려라 봄이 올 거야  
초승달 말하네 좀 더 기다려봐  
그믐달 말하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꼭 봄이 올 거야

아지랑이 말하네 봄이 오고 있어  
새싹 말하네 꼭 온다구  
꽃들 말하네 봄이야 봄

바람 말하네 저기 봄이 가네  
빗방울 말하네 벌써 지나갔는데  
햇살 말하네 명신 명신  
겨울에 일 끊겨  
아직 얼어붙어 있는 공사장  
그 겨울 일웃 벗지 못한 사람들  
웅크리고 웅크리고  
떨고 있는디



코로나 바이러스와 노동조합 ②

# 사회공공성 강화, 지금이 적기!

우리 노조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좁게는 생계위협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넓게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혁신하려고 한다.

노조는 현재의 위기를 공공의료·사회안전망·공공서비스유지의무(재난PSO) 등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기업종,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약한 계층의 고용과 생계부터 우선 지켜내야 한다. 동시에 조합원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계획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통한 ‘함께 살자’가 기본 정신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확인하고 노동운동의 대응을 위한 전 조직적인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맞는 태세로 조직을 정비한다. 이는 모든 사업계획 및 일상적 조직운영에 우선하여 코로나



경기지역본부 간담회 모습

19 경제위기 대응 사업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체제로 개편하고, 사무처 운영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정비하기로 했다. 5월부터 전 지역과 업종본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6월 17일 공동행동과 7월 4일 노동자대회로 결집하도록 조직 중이다. 동시에 노조의 핵심 요구를 사회여론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선전사업도 진행한다.

9월 초에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방식의 지역별·사업장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 고용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논의 중인데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건강보험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국고지원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기간산업 재난 PSO도입 등이 될 것이다.

시기구분	주요 사업 과제
단기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업종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금융지원 기업 해고 제한</li> <li>• 공항·항공 투본 투쟁 (투쟁사업장 지원 모금 포함)</li> <li>• 공공의료 확대, 공항·항공 고용유지지역 지정 서명운동+여론화 사업</li> <li>• 고용유지 지원 사각지대 지원 및 근로감독 요구(노정협의 포함)</li> <li>• 민주노총 ‘원포인트 사회적 협의’ 이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후속 협의</li> <li>※ 3차 추경(6월 예상) 개입</li> </ul>
중기 (~내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2020년 정기국회(예산 및 법안) 2021년 초 임시국회(법안)까지 처리 압박, 4차 추경(예산) 개입 포함</li> <li>※ (9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논의 중]</li> <li>• 공공의료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li> <li>• 전국민 (노동자) 고용보험 실현 제도와</li> <li>• 공공기관/공무직 2021년 예산(인건비·고용) 개입</li> </ul>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공공서비스 기업 (한시-영구)국유화 및 노동자 경영개입 등</li> <li>• 자본주의 경제체제 변혁을 위한 정치·사회운동</li> </ul>

현장 정치 소식

##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지급약속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국민

연금 개혁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의 전문가 토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강화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대국회는 사회적 논의가 종료되고 개혁과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을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국민뿐 아니라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조차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연금지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여 연금개혁의 물꼬를 틀 것을 국회에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공민규 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도, 국회의원도 모두 인정하는 개혁법안”이라며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신속히 처리해 20대

국회가 공적연금 개혁을 시작한 국회로 역사에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끝까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이번 연금개혁 과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지부는 연금개혁의 강력한 목소리를 20대 국회뿐 아니라 21대 국회에도 전달할 것이며 1인 시위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김태훈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대안사회를 위한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

노조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2020년 4.15 총선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 총선, 그 이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월 27일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오는 변화하는 정세와 열린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의 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진보정치의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재난과 그 이후 노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세계 경제와 고용의 위기,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급격한 사망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그리고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998년 IMF 이후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지고, 그 위기의 규모와 범위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특히 근로조건과 종사상 지위가 양호한 상용직은 고용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내고, 모든 면에서 취약한 그 외 계층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 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게 임교수의 주장이다. 구호성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로는 중장기적 위기 극복은 어렵다. 고령화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신사회협약>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대를 재구성하는데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 전망”을 발제한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총선의 정치적, 역사-사회적 측면을 분석하고, 촛불 항쟁의 연대는 끝났고 최대 승자는 “중산층”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산층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교육을 좌우하는 원조 강남 중산층에서 시작된 상위 중산층이 다른 계층에 대해 격차를 벌리며 기득권을 세습할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양당 지배 체제 완성에 일조한 지난 시기 진보정당 노선을 성찰해야 하며, 기존 역사적 블록의 해체와 대안역사블록의 구축을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운동의 궁극 목표는 한국 사회의 탈자본주의 변혁이며, 이런 장기 전략에 따라 원내외를 넘나들며 국가-시민사회를 재조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피해자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선시해야 하며,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더욱 확산될

첨단 비정규직, 즉 플랫폼 노동자나 재택 근무 노동자의 노동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 대안인 ‘녹색 사회국가-평화 공동체’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용석 정책연구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진보·민중·노동운동의 중심세력 자리매김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의회만이 아닌 광장정치를 통해 2020년 대선 시기를 겨냥한 진보정치의 공동의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정치의 통합 운동은 진보정치운동과 당면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위한 대중운동과의 결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적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보정치운동의 연대 및 공동 실천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정종권 편집장은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선거 시스템 외의 정치 인프라는 전무하거나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담론, 노동·청년·여성 등의 전략적 대상들과 일체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적극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갖는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고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의 노동의

제와 쟁점에 대한 독자적인 개입과 실천 방안, 목소리를 만들면서 노조운동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해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는 대응의 어려움을 먼저 들었다. 기업별노조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산별노조, 총연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동의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장기적인 위기를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제시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은 개별 기업에서 정리하고 반대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해법과 정부 차원의 정책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위기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전개된다는 현정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인 데 여전히 대안사회 전망에 대한 준비나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하게 주장했다.

※ 토론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이후 주소)를 통해 볼 수 있다.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https://youtu.be/zjLXWJJqMhU>

장석준(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https://youtu.be/D3WRITrvOJs>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장)  
<https://youtu.be/Xsk4IWv4-XM>

정종권(레디앙 편집국장)  
[https://youtu.be/s\\_jAGbXmTol](https://youtu.be/s_jAGbXmTol)